

데스크시각

오주승



민선 4기 출범 한 달도 못돼 광주에서 정치가 사라졌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자유롭다고 했던가,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지역 정치인들의 눈에 유권자인 시민들은 없다. 표에 목말라 고개 숙이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50%가 넘는 압도적 득표로 재선된 박광태 시장이나 패배의 고배를 마신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 이후 고소·고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주류·비주류로 갈라져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소·고발전 중단해야

정당한 의사전행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란 지방자치의 원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의장단 구성조차 못한 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아 준 셈이다. 시민들이 발등을 찌기에는 늦었다. 실종된 지방정치는 법원과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치인들끼리의 대화와 타

협이 사라지고 법률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법정과 검찰 수사에 의해 지방자치의 향방이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만 해도 선

검찰수사로 전락한 지방정치

거 후유증 정도는 금세 사라질 줄 알았다. 후보자 상호간, 또는 정당간 고소·고발도 선거 후 화해의 악수로 통합될 걸로 봤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특히 박 시장과 여당 의원들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 가고 있다. 조집은 민선 4기 단체장 취임식에서 엿보였다.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은 지난 3일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 취임식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광주 구정장 취임식에도 일부 여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어떤 편에서든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초창장도 보내지 않았다. 결례를 넘어 염치를 잃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선거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깊더라도 불성실함이 짙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정치에는 승자의 아량도 패자의 겸허함도 없다.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마져 날려버린 협박하고 살결경한 현실, 그 이상이다. 박 시장과 여당 의원들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재 노력도 몇차례 있었다. 박 시장과 여

동연 의원은 지난 13일 광주 시내 한 행사장에서 만나 화해를 다짐했다. 여 의원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여야, 당선자·낙선자 상관 없이 화해하는 데 내가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고, 박 시장도 “여 의원과 내가 어떤 사인가. 갈등은 없다”고 화답했다. 수백명의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해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토록 책임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여 의원과 박 시장간에 이런 다짐이 오간 지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20일 여 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여당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노벨상 정수회의 예산을 깎았다’는 박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 말 박 시장의 또 다른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며, 박광태 시장도 이에 맞서 여당 시장 후보였던 조영택 씨를 맞고소했었다.

지역현안에 머리 맞대야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중앙 부처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데도 광주시나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민중 성지’를 외치면서 지방정치를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시킨 양측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만나 화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한나라당을 찾아가 당정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싸움이나 하라고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표를 준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방정치를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하게 만들 정도로 정치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시설

정부 ‘광주문화수도’ 조성 의지 과연 있나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일정을 늦추고 특별회계를 유예하려는 등 광주문화수도에 ‘판죽’을 걸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화수도 조성은 허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화수도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주를 방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 끝에 문화수도로 정했다”며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스스로 광주·전남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문화수도를 공약한 것이다. 이런 광주문화수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정부의 논리를 보면 조성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일정을 당초 2010년 전면 완공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 완공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는 현실에서 사업기간부터 대폭 늦춰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

력이 없다. 정부의 국고지원은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에 한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광주시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취약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수도 특별회계 논의 자체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2010년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구차스럽게는 마땅하지 않다. 그렇기 않아도 광주문화수도는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문화수도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위원장만 선임됐을 뿐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한 채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문화수도에 대해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광주와 전남 주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은 거의 없다. 이런 식이라면 광주·전남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빨간불’ 켜진 경기, 경제운용 틀 다시 짜라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에 그쳤다. 최근 5분기 만의 최저치 성장률로 경기둔화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더 크게 둔화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해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 경기의 선행지수가 악화되고 유가 불안 심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친 점도 경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 이처럼 저조한 것은 건설업 부분의 성장률이 전기대비 -2.7%로 크게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다. 더욱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건설투자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경기가 반전될 것 같지는 않다. 건설경기 부진은 성장을 저하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위축 등 제각각의 악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는 경제 상태

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다 건설경기 전체에 타격을 주고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시장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또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혁파와 세계 지원을 통한 ‘기업 기 살리기’에 전력투구할 때다.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본격적인 경기하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5% 성장만 무난하다”며 낙관만 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실기(失機)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핀칼럼

김신희



몇 년 전의 일이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당시 자신이 상임지휘자로 있던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세종문화회관을 찾았다.(현재는 NHK 심포니의 상임지휘자이다.) 당시의 레파토리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과 말러의 교향곡 7번, 특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은 아쉬케나지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치며 지휘를 하여 많은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을 단번에 불러다였다. 당시 필자는 개인적으로도 아쉬케나지의 팬이었기에 너무도 큰 기대를 하고 공연장을 찾은 기억이 난다.

작했으며, 결국 그는 예정되어 있던 티뷰머로 취소하고 떠나버렸다. 우리나라의 현대전화 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최근에는 초등학교생조차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다. 그렇다고 이런 정보화시대에 현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사용하는 것.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여 현대전화를 꺼놓거나 진동모드를 바꾸는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보다. 공연장에서 아무리 현대전화를 꺼

현대전화와 공연문화

하지만, 당시의 공연은 악몽과도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때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의 휴대폰이 문제였다. 흥분과 기대 속의 음악회가 시작되고 할랄하고 상큼한 1악장을 지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졌다. 피아노를 치던 아쉬케나지도 아름다운 느린 악장의 멜로디에 도취된 듯 연주에 몰입해 있었고, 많은 관객들이 숨죽이며 조심스런 연주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때, 낭랑하고 청명하게도 울려 퍼지던 휴대폰 수신음. 휴대폰의 전원을 꺼놓지 않았던 그 관객의 휴대전화 멜로디는, 누가 고전음악 매니아가 아니라면 모차르트의 음악이었다. 게다가 더욱 장관인 것은 전화기 주인이 전화를 삼급하게 끝 때에도 휴대폰으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이 한번 더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아쉬케나지의 연주는 다소 흔들리기 시

달라고 안내방송을 해도 그들은 휴대폰을 끄지 않는다. 지금도 수많은 공연장에서 연주도중 휴대폰이 울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장에서, 영화관에서 휴대폰은 여전히 유행처럼 유포된다.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휴대폰은 수업시간에 울려 퍼지고, 선생님의 휴대폰도 수업도중 울려 퍼진다. 혹시 모른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중에 장관의 휴대폰이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현대전화 벨소리 좀 울린 걸로 별의 별 호들갑을 다 떠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법을 어겼느냐고 항의해 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하기만한 대한민국의 휴대폰 문화는 오늘날 우리시대가 겪고있는 문화적, 교육적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대변해주는 어두운 초상화이다.

<음악칼럼니스트>

은핀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소중한 의미 느낄수 있게 가족 분만 확산돼야

결혼을 늦게 해 40세가 넘어서야 첫 아이를 낳았다. 노산이다 초산인 탓에 불안해 하는 아내를 위해 가족 분만 방법을 택했다. 병원측은 “가족분만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산고 때 두 손을 꼭 잡아주어 긴장을 풀어주고 용기를 북돋는 이야기를 해주어 서로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남편이 출산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후기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의료 사고

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가족 분만 이야기를 꺼내면 “에이, 싸스럽잖아.. 그냥 여자혼자 낳지 뭐”하며 파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 남편을 생각도 바랄 때가 됐다. 남편도 산모와 함께 출산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결실인 아기의 태줄을 직접 자르면서 생명의 소중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족 분만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기고

박양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복이후 60년 공직사회 역사를 일거에 뒤집는 일대사건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1급, 2급, 3급 고급공무원 계급이 없어지면서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처럼 이제 계급장을 떼고 일의 성과로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이 외부에 담은 쌓은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뽕을 땀 일류였던 공무원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3류로 전락할까, 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국제 경쟁지수는 밀바다일까, 또 민간기업과의 격차는 왜 갈수록 벌어지는지, 공무원하면 왜 항상 무사안일, 보신주의, 복지부동 같은 꼬리표

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도 10여년 전부터 치열한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정체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혁신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인사와 조직 분야이다. 연공위주에서 능력과 성과위주로 과감히 바꾸고 필요하다면 공모제를 도입해서라도 적재적소의 인재를 외부에서 발탁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기업을 대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씩 성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자

가 따라 다니는 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관습이나 반복적 고리를 끊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합리적 사고체계를 근간으로 객관적인 상식과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보는 것이 혁신이다. 최근 들어 공기업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은 일본기업의 장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고 종업원은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에 보답해 왔

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조차 힘든 민간부문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서신을 보낸 적이 있다. 대통령이 모 일간지의 “혁신...뭔가 이게”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후 아직 혁신이 일부 공직사회에 골고루 정착되지 못한 점이 마음 상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다짐의 글이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힘을 모아주는 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혁신학습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광업진흥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아파트 분양 받을때, 근저당권 등 살펴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대부분은 아파트를 짓는 회사의 인지도를 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땅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면 분양자들은 회사를 믿고 분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부지에 대한 담보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등기·압류 여부 등을 모른 채 시공 건설회사 브랜드만 믿고 분양을 받는다. 이 때문에 나중에 시공사의 부실과 부채 문제 때문에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도 못하거나, 입주자들이 여태의 분양가를 완납한 아파트가 다른 은행들의 가압류를 당해 있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지권에 대한 권리 분석에 필요한 서류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 시 분양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 두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험 여부를 분양 받을 사람들이 사전에 서류 검토를 거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손혜정·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無等鼓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론자들이 제기해온 이른바 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가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한국이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미의회의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협상 개시전에 미국측이 제기해온 이들 요구를 수용, 협상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4대 선결 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을 말한다. 이는 양국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비판 근거의 하나로 제시해온 문제다. 이들은 작년 2월 미 행정부가 의회조사국에 제출한 '한미 관계-FTA 협력·마찰·전망'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이 보고서에는 약값 문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이 의심을 살 법하게 적시돼 있다. 정부는 이들 사안이 양국간 오랜 현안으로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사전별로 대처한 것이며 스크린쿼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안들은 아직 해결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작년 9월 대외경제위원회 문건에 선결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다.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4대 선결이라는 표현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양국 정부가 지난 2월 미국에서 협상 개시 공식 선언 하루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때도 비판을 자초했다. 결국 정부가 보인 허점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특히 2차 협상때 미국이 약가정책 방안에 강하게 반발한 점에 비춰볼 때 선결 조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정부 관계자의 협상 선결 의지와 대국민 설득 노력 개발이 중요한 때다. /김우승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4대 선결조건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